

# 제주의 對중국 교류활성화 방안

## - 제주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김 명 아

### [ 목 차 ]

1. 서 언
2.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와 정부 간 협력
3. 중국의 지역별 경제특구성 시범구의 발전
4. 제주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의 모색

## 1. 서 언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여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및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또한 중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더욱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중 FTA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제주의 對중국 진출 및 교류활성화 방안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최근 대

내외 경제정책을 기초로 지방 정부간 협력의 현황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본다.

## 2.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와 지방정부 간 협력

### (1) 한-중 경제협력 강화와 정부 간 협력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에서는 산업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역 간 경제협력 방식으로는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한국 인천 IFEZ-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수행으로 향후 한-중 지방 정부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중FTA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통하여 양국 정부 주도의 산업협력단지 공동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중 FTA 협정문(한글 번역본)
제17장 경제 협력
제17.25조 지방 경제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 당사국은 동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동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각 시정부에 의해 논의된다.</li> <li>2. 시범 협력 사업은 동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경제 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li> <li>3.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li> </ol>
제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 당사국은 지식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해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li> <li>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해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li> </ol>

## (2) 우리나라의 지역별 지방정부 간 협력 추진 현황

인천의 경우 도시네트워크 육성을 통해 성장의 중심축을 육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환발해 권역의 중국도시들과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천은 중국 산둥성의 정책적 액션플랜에 따라 산둥성 내 7개 핵심도시인 웨이하이시의 지방경제협력 동반자로 선정되어 있는 바, 웨이하이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인천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간에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sup>1)</sup> 특히, 웨이하이시는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国家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城市)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 6월에는 종합보세구로도 지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인천(IFEZ)과 웨이하이시 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례는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지리적·정책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웨이하이시의 혁혁한 성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7대 핵심도시 중에 하나인 동잉시와 경제협력 동반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새만금과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나 한중FTA 산업협력단지 배후지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곳이다. 새만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주관하는 한-중 경협단지 내지 한-중산업협력단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함께 관할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중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대 중국 향후 교류 과제로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매뉴얼이나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업 및 양국 도시 간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고, 중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 플랫폼을 확보하여 무관세, 면세, 외환거래자유, 무비자 혜택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sup>2)</sup> 최근 부산시는 해양·무역도시, 금융도시로서의 지리적·정책적 유사성을 기초로 중

1) 브릿지경제, '인천경제청 한·중 FTA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 포럼 개최' 브릿지경제 서울·수도권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2016. 11. 27. 검색(<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122010006843>)

2) 장정재, '부산광역시 대중국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IN China Brief』 vol. 275, 인천발전연구원, 2014. 9. 15, 18~20면.

국 산동성의 칭다오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대구시와 경산시는 칭다오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밝힌 바 있고, 중국측의 중한FTA 산업협력단지 3곳 중 하나인 장쑤성의 엔청(鹽城)과도 산업적 유사성을 기초로 글로벌벨류체인 구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칭다오의 중-한 무역협작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sup>3)</sup>

이처럼 현재 한-중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정부 간 교류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기를 띠고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후속협정 체결에 따라 이러한 중앙정부 간 내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식의 교류협력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3. 중국의 지역별 경제특구성 시범구의 발전

#### (1)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변화

최근 중국은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을 기초 내용으로 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 전략을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빠른 속도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즉, 주변국과의 협력 내지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중국의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나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十三五”规划(2016~2020))」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실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2015년 3월 28일 공동으로 마련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비전과 행동 추진(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하, 일대일로 행동추진 방안)은 서문과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国际金融报는 2015년 6월 29일자 기사(‘일대일로:무역원활화가 최대 핵심(“一带一路”:贸易畅通最核心)’)를 통하여 ‘향후 세계경제 판도는 TPP와 일대일로로 구성’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4)</sup>

3) 张仕珊, “中韩贸易合作区落户青岛暂命名青岛韩星城”, 中国山东网青岛频道, 2014.08.15.(<http://qingdao.sdchina.com/show/3053252.html>)

4) 张仕珊, “中韩贸易合作区落户青岛暂命名“青岛韩星城””, 中国山东网青岛频道, 2014.08.15.(<http://qingdao.>

다음의 표는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5通)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 ] 일대일로 행동추진 방안의 5대 중점협력사항과 내용<sup>5)</sup>

5通	구체적 방안
정책 협력 (政策沟通)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협력기제 마련
교통인프라 구축 (道路联通)	중국과 각국을 연결하는 교통·해운·항만·에너지 인프라 구축
무역 편리화 (贸易畅通)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활성화, 검역 및 인증·표준 협력
금융 협력 (货币流通)	실물경제기반 금융·통화 협력, 통화스왑 규모 및 결제 범위 확대, 아시아 채권 시장 개발, 해외기업의 중국내 채권발행
민간 교류 (民心相通)	유학생 지원, 관광협력, 실크로드 관광상품 개발, 출입국 간소화

이에, 2015년 5월 27일에서 28일까지 시안(西安)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세관 고위급 포럼(‘一帶一路’海关高层论坛)’에서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일대일로 건설 실시방안(“一帶一路”建设实施方案)」을 통한 16개 지원조치를 제안하여 액션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다.

[ 표 ] 중국 해관총서의 ‘일대일로 건설 실시방안<sup>6)</sup>

구분	주요 내용	실천 사항
일대일로 공동건설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접경지역 발전</li> <li>- 접경지역 관리방식의 혁신</li> <li>- 대규모 국제물류통로 건설 추진</li> <li>- 대규모 해상운송 건설 촉진</li> <li>- 접경지역 관리 관계부처 간 정보교환, 감독상호인증, 법집행 협력</li> <li>- 일대일로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의 중점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운송물류관리센터 건설</li> <li>- 창구단일화 추진(2017년 전국 시행)</li> <li>- One-Stop 통관 추진</li> <li>-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 광둥지역개발 구의 경험을 토대로 신아시아-유럽브리지와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li> <li>- 실크로드경제벨트와 동북지역세관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li> </ul>

sdchina.com/show/3053252.html)

5) 김명아, ‘일대일로와 한중FTA가 새만금 사업에 주는 법적적 시사점’, 『일대일로와 새만금개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6. 24, 62면의 표를 인용.

6) 김명아, 위의 글, 63면의 표를 수정·보완.

구분	주요 내용	실천 사항
일대일로 경제무역 산업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의 대외개방 확대를 지지</li> <li>-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지</li> <li>- 새로운 무역방식 발전의 지지</li> <li>-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적극 추진</li> <li>-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과 보세구 감독 관리장소 우대정책 발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서부지역 개방창구로 활용, 푸젠성을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건설하여 전파력을 발휘</li> <li>- 산업우위에 따른 해외투자, 기술표준 수출, 세관수출 가공화물 관리방식의 완비</li> <li>- 관련국가간 투자설비수출등록부 마련을 통하여 통관편리화 조치 시행</li> <li>-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li> <li>- 일대일로 관련지역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구축 및 해양형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개발</li> </ul>
일대일로 해관 등 접경지역 법집행 부문간의 국제협력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의 내용과 기제 다양화</li> <li>- 양자간 세관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li> <li>- 세관구역 국제협력심화로 유기적인 작용 발휘</li> <li>-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인 참여로 세관의 영향력 점진적 확대</li> <li>- 상호협력 시범사업 구축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급포럼 개최</li> <li>- 관련국가 세관 연합감독관리 추진</li> <li>- AEO(성실무역업체) 인증, 세이프스마트 무역항로, 리스크관리, 데이터교환, 법집행,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양자간 협력 추진</li> <li>- 행동 추진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협력기제 중,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ASEAN 협력(10+1),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CAREC), GMS경제협력 기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li> <li>- 세계관세기구(WCO), APEC세관수속분과위원회, ASEM 관세청장회의, BRICS 관세청장회의 등 다자간 협력 기제 구축 및 표준화 실시</li> <li>- 중-러 접경관리감독 결과 상호인증, 중-카자흐스탄 Green Channel, 중-몽 세관 연합감독, 중-유럽세이프스마트무역협력, 중-유럽 육해상 통관 편리화 협력, 중-유럽/중-뉴질랜드 AEO상호 인증 협력</li> </ul>

한편, 중국이 제시한 ‘중국 제조 2025’의 주요 내용<sup>7)</sup>은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글로벌밸류체인을 활용한 산업 간 연계협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제조 2025’에서 밝히고 있는 10대 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7) 정진우,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 밀그림 ‘중국제조 2025’ 발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42호, KOTRA, 2015. 5. 22, 8면의 표를 인용.

[ 표 ] 중국 제조 2025 10대 산업

10대 산업	주요 내용
차세대 IT 기술	- 집적회로 및 전용설비 - ICT 설비 - OA 및 공업용 SW
고급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 로봇, 서비스형 로봇 등)
항공 우주 설비	- 항공설비(대형 항공, 중형 헬기, 간선 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설비(발사용 로켓, 신형 위성, 위성 원격탐지, 달 탐측기술 등)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 해양공정 설비(심해 탐측, 자원 개발, 해상작업 설비 전용설비 등) - 첨단선박(크루즈 설계, 액화천연가스 선박 등 첨단기술 선박 개발)
선진 레도 교통설비	- 신소재, 신기술의 응용 및 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상품 연구 등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모터, 고속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화 소재, 스마트 제어 등 핵심 기술의 공업화 및 산업화 능력 제고 등
전력 설비	- 고효율 석탄전력설비 산업화, 수력발전/원자력발전/중형가스터빈 생산수준 제고 및 핵심 부품과 원자재 기술 제고 등
농업 기계 설비	- 첨단 농기구 및 핵심부품 발전 가속화
신소재	- 신소재 핵심기술과 설비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영상설비, 의용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원격진료, 3D bio-printer, 다용도 줄기세포 등

다만, 기존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의 산업역량이나 기술 수준을 추월<sup>8)</sup>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서의 협력모델을 구상할 때에는 최신의 중국 기술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 1) 해외경제무역합작구

2002년 이래 중국정부는 중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해외투자장려 정책(‘走出去’)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 허가하여 건설중에 있다. 해외경제무역합작구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형태가 없이 중국기업들의 해외운영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한 유형으로서 초기에는 하이

8) 중앙일보, ‘한국 제조업 10년 뒤에 보자...발돋움 내민 중국’ 중앙일보 경제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2016. 11. 27. 검색([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99856&cloc= olinkl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99856&cloc= olinklarticledefault))

얼미국공업원구(海尔美国工业园)와 푸지엔화치아오공사(福建华侨实业公司)가 쿠바에 설립한 해외공원원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개념적인 것으로서 시장 전망이 밝지 않았다.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련의 국유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해외공업원구를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천진시보세구투자공사가 미국에 텐진미국상무공업원(天津美国商务工业园)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발전은 없었다. 2005년 말 중국 상무부는 해외경제무역합작구에 관한 대외투자협력조치를 발표하고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을 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6년 6월 상무부는 “해외중국경제무역합작구의 기본요구 및 신청절차(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的基本要求和申办程序)”발표를 기점으로 정식으로 해외합작구 설립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11월 26일 중국 최초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인 하이얼-루마 경제구역이 파키스탄에 정식 건립되면서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의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 (2) 자유무역시험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PFTZ(Pilot Free Trade Zone); 自由贸易试验区)는 대내외 자본의 평등한 권리 보장 및 외자유치 확대 촉진과 서비스업에 대한 확대, 무역 방식의 전환에 대한 촉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Test-Bed(시험구)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전국적인 관련 정책 시행 이전에 관련 시험구에서의 시범업무(Pilot Program)를 운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정책에 대하여 전국 규모로의 점진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을 시작으로 한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4곳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추가로 7곳을 더 지정하여 현재에는 11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운용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

	자유무역시험구(PFTZ)
정책 근거	- 자유무역시험구종합방안(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sup>9)10)</sup>
외자 진입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sup>11)12)</sup>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 <sup>13)</sup>
세관 관리	- “경내 관외” 세관감독관리 - “1선 개방 <sup>14)</sup> , 2선 안전고효율관리 <sup>15)</sup> ”
세관 수속	- 세관 관할이 없는 지역 - 무역 제한 없는 관세면제 지역 - 일반적인 검사수속을 축소하여 기업 거래비용 인하
관세·조세	- 관세 면제 - 관세 외의 조세우대 가능
보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주요 기능	- 상품무역, 투자, 서비스, 금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외환 관리	- PFTZ건설 외환관리 실시세칙(自由贸易试验区建设外汇管理实施细则)

- 9)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2014년 12월 28일)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3년간 4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관련 법률 행정허가 적용을 일시중지하는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以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扩展区域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을 통하여 4대 PFTZ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음.
- 10) 중국에서는 헌법·법률(기본법률·기타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단행조례·지방정부규장 등 입법법에 규정된 다양한 법규 외에도 '정책성 문건의 효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6조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民事活动必须遵守法律,法律没有规定的,应当遵守国家政策).” 고 규정하여, '국가 정책에 대하여 법원(法源)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11) 2015년 4월 20일 발표, 5월 20일부터 시행
- 12) 중국은 2015년 3월 13일 '201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발표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동 목록에서는 제한대상을 2011년의 79개에서 38개로 축소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하였음.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선박선실기계, 변전설비, 전자상거래, 교통 운수, 금융, 문화 등이 개방되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사물인터넷 등은 장려류에 포함됨.
- 13) 2015년 4월 20일 발표, 5월 20일부터 시행
- 14) 1선 개방(一线放开)이란, 외국에서 반입한 화물을 통관·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항)구로 반입하고, 보세(항)구 내 화물도 통관·검역 절차 없이 외국으로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함을 뜻함.
- 15) 2선 안전고효율관리(二线安全高效管住) 방식은 보세(항)구에 보관된 외국 반입화물이 보세(항)구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되거나 보세(항)구 외의 화물이 보세(항)구로 반입되면, 중국내 세관(海管) 관련 법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3) 국경간 전자상거래시험구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닝보 등의 5개 도시는 2012년 국가전자상거래시범 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2015년 3월 국무원은 5개 도시 중 항저우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항저우가 국경간 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로 지정된 배경에는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역할이 컸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16년 초 기존의 국가전자상거래 시범도시였던 상하이, 충칭, 정저우, 닝보와 함께 광저우, 선전, 텐진,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12개 지역을 추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 표 ]는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표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발전 연혁 및 특징<sup>16)</sup>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항저우	2012.12.20. 국경간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시범사업 (中国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 시행	2015.3.7.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关于设立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管理办公室的批复)	· 최초의 국경간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알리바바 소재) · 국경간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 시범지역(跨境电商生态示范区) · 통관·조세·외환·검역·상거래·물류·금융 관련 정보의 통일적 관리
	상하이, 닝보, 충칭, 정저우		2016.1.12. 12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关于同意在天津等12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 항저우의 6대 시스템·2대 플랫폼 정책의 확대 적용 · 해외기업과 중국 온라인 판매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한 소비자 구매 방식 (B2B2C) 가능
		광저우		
		선전		
		텐진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16) 박진희·이한나,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 시사점”, 『지역 기초자료 16-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6.23., 9면의 표를 인용.

한편, 2016년 4월 중국은 「“인터넷+유통” 액션플랜 실시 심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深入实施“互联网+流通”行动计划的意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를 통한 물류·유통의 혁신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 표 ]는 동 의견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 ] 「“인터넷 + 유통” 액션플랜 실시 심화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sup>17)</sup>

<p>2016.4.15. (2016.4.21. 시행)</p>	<p>“인터넷+유통” 액션플랜 실시 심화에 관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深入实施“互联网+流通” 行动计划的意见)</p>	<p>국무원 판공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온라인 창업·창조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사무실·통신설비·경영지도·인력양성·업무추진·자금조달 등의 방면에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li> <li>· 스마트유통 기초시설을 강화하여 물류기지과 콜드체인을 구축</li> <li>· 녹색·자원순환·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유통단말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통방식 개발</li> <li>· 농촌과의 연계를 통하여 콜드체인과 6차 산업을 발전</li> <li>· 전자상거래 보편화를 통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li> <li>· 무인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시범사업 및 신고·인증, 전력소모량 선정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체험점 개설</li> <li>·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상품·주문·계약·영수증발급·운송장개설 등에 관한 공공서비스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융복합형 인력을 양성</li> <li>· 법규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인터넷+수취 체계도 추가적으로 마련</li> <li>· 중간관리감독 및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무권한 거래를 근절하며, 법치주의에 기초한 영업환경을 조성</li> </ul>
---	--	--------------------	---

17) 김명아, “중국의 무역 관련 시범지역 제도 활용을 통한 한중협력 제고 방안”, 『IN China Brief』 Vol.321, 인천발전연구원, 2016.08.22, 11면의 표 일부 인용.

#### (4)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위에서 살펴본 해외경제무역합작구나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와 같은 전국적 규모 내지 국제적 규모의 시험구 외에도 중국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별 경제구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서는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지역(中日韩区域经济合作试验区)’으로 알려져 있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山东半岛蓝色经济区)’가 주목할 만하며, 각 언론의 동향으로 보더라도 산둥성 정부는 한국과의 교류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2011년 1월 「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 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를 마련하고, 같은 해 2월 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 건설관공실 주임은 산둥반도를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지역(中日韩区域经济合作试验区)’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계획에서는 칭다오(青岛)-웨이팡(潍坊)-르자오(日照)와 이엔타이(烟台)-웨이하이(威海), 동잉(东营)-빈저우(滨州) 3개 권역의 협력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산둥성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은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구로 조성된다.

특히, 동 발전계획을 통하여 항로개설을 통한 자연인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호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편리화 측면에서도 중일한 양국 혹은 다국적인 검역, 세관 협력시스템 아래, 산둥성에서의 시험적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과의 수출입 무역, 식품안전 및 관련 영역 상호 신뢰관계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중-한-일 간의 전자 세관(단일 경로) 데이터 교환 표준화 노력을 통하여 전자 상거래 인증체계와 물류배송체계 수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한-중 간, 제주-중국 지방정부 간 전자상거래에도 시범사업 구축을 통한 무역편리화 조치가 기대된다.

## 4. 제주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의 모색

### (1)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활용 및 교류·협력 강화

제주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등의 시범지역 정책을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각 시범지역의 입지와 특성, 주된 지원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모델과 주도적인 상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의 운용에서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능을 마련하여 가고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즉, 각 자유무역시험구와 경제개방 특구들은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능을 마련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경우에도 향후 대 중국 경제협력 정책에서 지역적 특성을 최대화하고 그 산업우위별 협력과 네트워크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의 경우에는 환경수도 이미지를 부각시켜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바이오산업 발전 가능성,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산업 기반, 건강하고 쾌적한 헬스케어 산업 이미지의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 상호연계한 다양한 산업기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제주에 적합한 규제특례 모델 개발

제주의 경우 규제특례지역 조성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가 국내 다른 지역 및 중국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시범사업 수행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가지는 법적 지위와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무역편리화 분야에서의 One-Stop 통관, TBT·SPS 인증 협력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 제주의 무역편리화 시범사업을 통한 對 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대상	교류 활성화 방안
자연인 이동	- 별도의 출입국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연인이동 개방조치(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활용)
통관	- 중국은 최근 온라인금융과 해외직구 규범화를 통한 국경간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sup>18)</sup> - 제주에서도 최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OneStop 통관시스템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제주 해외직구플랫폼)을 추진 - 중국은 일대일로 5通 중 '무역 편리화에서 AEO 상호인증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두고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임
시험·인증	- 국경간전자상거래에 필요한 EDI정보교환·목록신고정보작성·X-ray검사 등 협력, 결제시스템(핀테크 활용방안) 구축, 페리 화물차운송 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체계 협력, 페리 화물차운송 시스템을 연계한 물류·택배 방식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행방안 확보, TBT·SPS의 WTO-Plus수준 협상 필요 -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식품, 화장품, BT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 - 4대 자유무역시험구와 산동성 웨이하이(중·한 지방협력 시범지역), 중·한FTA산업단지(엔타이,엔청, 광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성공 사례 도출
금융	- 일정수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 실현 -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 및 중한산업단지와, 금융특구와의 무역 및 투자, 결제 시 금융편리화 조치 및 자유화 수준 제고 - 제주 관광자원 및 청정지역 특성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개발 - 한·중 공동 제주투자기금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제주투자플랫폼 구축

다만, 이러한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과 제주도의 주도적인 시범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으로 그 성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제주 지역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서 제주가 국내 다른 지역 내지 중국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인 식품 산업에 대하여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김명아 외,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158~160면; '꺼져가는 중국 성장 불꽃, 해외직구가 살린다' 뉴스핌 기사, 2015. 6. 17.(2015. 6. 17. 검색(<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616000440>))

### 3. 양국의 정책 활용을 통한 제주 식품의 중국 진출 전략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식품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정책 및 법제를 활용하여 제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 전략, 품질인증 지원, 수출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원산지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5년 2월 26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는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FTA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시 도약을 중심으로 한 신속통관 및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제주 식품의 문화·컨텐츠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비하여 문화·컨텐츠 산업이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친환경·웰빙 등의 제주 식품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화·드라마 등)를 활용<sup>19)</sup>함으로써 레시피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제주 식품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사슬을 컨텐츠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하여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맨드롱 또뎃’ 등의 예와 같이 서비스산업에서의 문화·컨텐츠 연계를 통하여 제주 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레시피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제주식품에 대한 이미 지 제고 및 실질적인 소비 유인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9) 중국 온라인 소비자들의 특징 및 미디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지형 외(2012), 『중국 온라인 시장을 통한 제주산 가공식품의 중국 진출 가능성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9~34면을 참고

## 나. 제주 종합식품클러스터의 유치 및 조성 6차산업 지원정책의 필요

전국의 농·림·축·수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모두 플랫폼에 집적화할 수 있도록 제주와 부산, 새만금, 익산, 인천 등을 연결하는 식품수출벨트가 조성되면,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식품 해외직구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이 높고, 제주 연계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추세<sup>20)</sup>와 제주 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sup>21)</sup>를 활용하여, 제주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부산국가수산물유통가공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연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제주 식품의 비교우위를 가장 특성화 할 수 있는 제주 종합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클러스터에는 R&D 기능의 강화와 산업 간 융복합 발전을 위하여 동 클러스터 내에 IT·BT 기반 융복합 식품 R&D 센터와 함께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 등의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센터 유치가 필요할 것이며,<sup>22)</sup> 제주 종합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해외경제무역합작구(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제주와 중국 지방정부·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투자자 확보와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문화·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서는 제주 내에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제주(신선·가공)식품 해외직구플랫폼 구축

중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으므로, 제주와 중국 각 지방정부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무역편리화(One-Stop 통관,

20) 전형진(2015),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핑-2015년 06월 특별기고』, 산업연구원, 2015. 6. 24, 52~60면

21) 상세한 내용은 정지형(2015), ‘중국 유기농 식품시장 현황과 제주의 향후 과제’, 『JDI 정책이슈브리프』 No. 218, 제주발전연구원, 2015.1.29.; 정지형(2014), ‘중국 안전식품 소비 확대와 제주의 향후 과제’, 『JDI 정책이슈브리프』 No. 192, 제주발전연구원, 2014. 6. 10.를 참고

22)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의 유치 배경과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서는, 강승진·고봉현(2014),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 유치 필요성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2014. 11, 1~108면을 참고

SPS/TBT) 인증 협력 등) 조치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과징통 등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업체를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국 국내 법규와 해외기준을 충족하여 One-Stop 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반입된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와 품질 확보의 효과가 있으며, 해외판매자 입장에서도 통관·인증·라벨·관세·물류 등의 간소화가 가능하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은 최근 전세기로 해외 신선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할 만큼 식품 해외직구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sup>23)</sup> 이러한 중국의 시장 변화를 빠른 속도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구축 방식은 위에서 제안한 제주 종합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산업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환경이 가장 적합한 입지에 ‘제주(신선·가공)식품 해외직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이처럼 제주가 선도적으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지 한·중 FTA 관련 지역들을 타겟팅하여 그 특정지역과 한·중 간 SPS 인증 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제주 식품 분야의 직접적인 중국 수출 확대 효과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식품 유통은 신속한 통관 및 위생·검역 간소화가 최대 관건이므로 양국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주식품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운용을 통하여에서 One-Stop 통관, SPS 인증 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주식품 중국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제주·내륙 간 농·림·축·수산물 유통 관리체계를 활용하는 한편, 한·중 양국 간 물류 및 통관을 간소화할 수 있는 SPS, TBT 표준화 및 One-Stop 통관, 폐리화물차 운송 체계를 유기적으로 마련하여 제주가 ‘전국 식품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48시간 통관 원칙을

23) 한국무역협회 상하이무역관(2014), ‘활짝 열리는 중국 신선식품 해외직구 시장’,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무역정보-해외뉴스, 2014. 10. 7.(2015. 6. 29. 검색(http://www.kita.net))

24) 김명아(2015), ‘一帶一路(OBOR)와 한·중 FTA의 정책적 활용전략’, CSF전문가포럼-동향정보-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7. 1. 11면.

최대한 활용하고, 양국 냉장화물차의 일정 지역 내 직접 통관·운송 시스템 개발 및 TBT<sup>25)</sup>, SPS 시범사업을 모색할 수 있겠다.<sup>26)</sup>

또한, 제주도가 11개 자유무역시험구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와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산동성에 소재한 엔타이 중한FTA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시험지역인 웨이하이, 금융개혁종합시험구이면서 해양·물류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하게 가진 칭다오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인천, 부산 등과 동반협력방식의 대 중국 교류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7)</sup>

이 밖에도 엔칭 내지 웨이하우 중한FTA산업협력단지나 188개 국가급수출식품농산품품질안전시험구(国家级出口食品农产品质量安全示范区)<sup>28)</sup> 및 우한 동후 종합보세구식품보세물류원<sup>29)</sup> 중에서 협력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호인증 시험사업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역편리화를 위한 시험사업의 대상으로는 EDI정보교환·목록신고정보작성·X-ray검사 협력, 결제시스템(핀테크 활용방안) 구축, 페리 화물차운송 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체계 협력, 페리 화물차운송 시스템을 연계한 물류·택배 방식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행방안 확보, TBT·SPS의 인증 표준화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5通<sup>30)</sup> 중 '무역편리화'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활성화, 검역 및 인증·표준 협력을 주요 협력사항으로 두고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5) 제주지역 컨테이너의 물류상 문제점과 물류표준화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승철(2015), '제주지역 컨테이너 물류표준화 방안', 『JDI 정책이슈브리프』 No. 220, 제주발전연구원, 2015. 4. 14. 참고

26) 한국과 중국이 2010년 체결한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3호, 2010. 11. 24.)에 따라 제정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4-호)에 따라 실무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과의 경험 핵심지역인 푸젠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의 시험구내 주행과 운전 자격인증을 이미 시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27) 중국 후베이성(성도는 武汉)의 경우, 웨이하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험지역과의 긴밀한 중국 내 지역협력(enclave)방식을 통하여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28) 国家级出口食品农产品质量安全示范区

29) 武汉东湖综合保税区食品保税物流园

3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는 2015년 3월 28일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비전과 행동 추진(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하, 일대일로 행동추진 방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5대 중점협력사항(5通)으로 1. 정책 협력(政策沟通), 2. 교통인프라 구축(道路联通), 3. 무역 편리화(贸易畅通), 4. 금융 협력(货币流通), 5. 민간 교류(民心相通)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들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범사업 수행과 함께 중국의 제품인증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sup>31)</sup> 향후 협력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1) 중국의 수입시장과 통관 및 E-Commerce 동향에 따른 제주의 단기적 대응방안에 대하여서는 한승철(2014), '중국의 수입시장과 통관·E-무역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JDI 정책이슈브리프』 No. 205, 제주발전연구원, 2014. 11. 18. 참고